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9월 ~ 10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 의무, 증서, 수출, 식품, 정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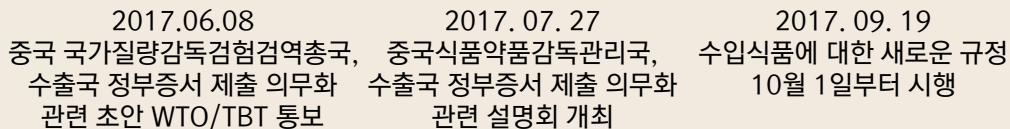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중국, 정부, 의무, 증서, 수출, 식품, 정책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핵심이슈
도출

중국, WTO에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증서 제출 의무화 관련 내용 통보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중국, WTO에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관련 내용 통보

2017년 9월 2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이하 질검총국)이 수입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규정에 대해 시행 기간을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질검총국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은 첫째,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우려되는 국제무역의 혼란을 잠식시키기 위함과 둘째, EU와 미국이 중국 정부에 완곡한 규제 변화를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질검총국은 지난 2016년 4월 유럽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규정에 대해 정식으로 미리 통보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실행의 목적을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국 질검총국이 발표한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규제는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모든 수입업체에 대해 수출국의 관련 부서에서 발행하는 정부 증서(중문·영문 통용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이에 적용되는 식품 대상은 빵 및 과자, 사탕, 조미품, 음료, 술, 과일 통조림, 보건식품, 특수선식식품 등이 해당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 강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 자국산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수준을 넘어 수입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정책 또한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발표된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제도 또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발표되면서 수출기업은 중국 통관 시 관련 정부 증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 증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부분은 수출 제품이 중국 식품 안전법률법규 및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수출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 WTO에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관련 내용 통보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finance.sina.com.cn/stock/usstock/c/2017-09-26/doc-ifymesii5775233.shtml>

1. 欧盟称中国将食品进口新规实施期限延长两年, 和讯网, 2017.09.26
2. 我国发布进口食品随附证书管理办法(草案)补遗通报, 食品伙伴网, 2017.09.27